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brary Policies and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한 상 완 (Sang-Wan Han)**

김 태 수 (Tae-Soo Kim)**

전 현 준 (Hyun-Choon Chun)**

이 승 채 (Sung-Chae Lee)**

목 차

1. 서론	3.2 도서관계의 협력
1.1 연구의 목적	3.3 통일을 대비한 동서독 도서관의 정책
1.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4. 통일대비 도서관 정책과 제도 개발 모형
2. 북한의 도서관 현황과 정책 및 제도분석	4.1 통일전 선 협력구도의 마련
2.1 도서관 현황	4.2 통일대비형 도서관 정책과 제도모형의 개발
2.2 출판현황	5. 결론 및 제언
3. 독일 통일 전후의 도서관 협력 사례와 정책	
3.1 문화협력	

초 록

도서관의 냉전을 종식하고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 돌입한 세계정세는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중심으로하여 자국 우위의 경제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세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분단된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문명의 큰 흐름이 정보사회로 변전하는 이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공, 축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도서관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 정보사회형 정책과 제도 개념 2) 민족문화중심의 정책과 제도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에 앞서 우선적으로 남북한 도서관간의 협력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종합목록의 작성, 자료의 상호대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목록규칙의 작성, 학위논문의 교환 등과 같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원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 이 논문은 1994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 접수일자 : 96. 2. 15

셋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일은 지배 모델로서의 통합흡수형이 아닌 상호의존 모델로서의 병존협력의 개념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원리에는 1) 자유경쟁의 논리 2)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혁 3) 자주 의식과 인류애 4) 과학적 내지는 합리적 사고 5)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6) 민주시민정신 7) 공동체의식 8) 공익정신 9) 세계정신을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제도모형은 남북한의 도서관이 1) 도서관의 위상통일 2)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3) 전문인력의 교류 4) 정보자료의 교류 5) 학술정보망의 구축 6) 문헌정보학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준향상 7) 현대화 및 정보기술 개발과 이익 등을 내용으로 갖추고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동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한의 도서관은 그 개념, 운영목적, 자원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그 실용성의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도서관은 통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 충격이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상호 공조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world has moved from the Cold War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and moved toward the age without ideology. It places emphasis on economic benefit and welfare of its own nation as its main point. With this world trend, in order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and the reconciliation of the divided nation,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should be united.

Once the north and the south are united, information society will be altered with the huge flow of the civilization. At the same time, the issue of how to operate library policies and system, in which effective acquisition, manipulation, accumula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ccurs, would be very important. From this point of view,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obtained in this study.

Firstly, when building a national library preparing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1) the concept of policy and system for information society and 2) that of policy and system which has national-culture as its focus.

Secondly, it is essential to prepare the cooperative-structure between libraries prior to the national unification. This kind of cooperation should gradually expand to an extent that allows actual benefits such as building union catalog, inter-library loan system, resource sharing, standardized cataloging rules, and exchange of dissertation... etc.

Thirdly, developing the library policies and systems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must b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mutual cooperation as inter-dependent model, rather than on the concept of the incorporation-absorption as a dominant model.

The next point, the principles of the followings in preparing the library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1) free-competition, 2) revolution of consciousness through the social education, 3) independence and love for humanity, 4) scientific or reasonable thinking, 5) job responsibility, 6) democratic citizenship, 7) mind for collective life, 8) spirit of public interest, 9) globalization In addition, the model of the library systems preparing for thenational unification should include the followings: 1) uniformity of library system and its authority, 2) establishment of research institutes for library policy and system, 3) exchange of library experts and information resources, 4) building library networks, 5) establishment of education systems for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enhancement of its quality, 6) modernizing and develop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transfer.

Finally, the libraries in the north and the south has different concepts, goals, information resources, and the different ways of using them. Considering the practical aspects of the libraries and the reasons for their existence, they must structure the mutual cooperative system so as to minimize the shock when confronting the social changes, so-called the national unification.

1. 서 론

세계는 동서간의 냉전을 종식하고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 들어와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관계나 국교관계도 불과 10년 전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 가장 가까운 북한을 제외하고는 소련, 중국, 동구권 어느 나라와도 국교수립 또는 경제교류를 틀 수 있게 되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냉전시대 미 소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급진전하였다. 이제는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며 경제적 협력과 자국 우위의 경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와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세계협력 구조의 틀에서 특히 자국 생존경쟁의 우위 확보를 위한 현장에서 분명하고 자신있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시대적 염원인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역동적 변화는 우리에게 통일의 전기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짚고 하고 있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 총리에 의하여 서명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도출해 내었고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그 문본이 교환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 합의서의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끝에 1992년 9월 17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남북교류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문명의 큰 흐름이 정보사회로 변전하는 이 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공, 축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국가적 중대사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정보유통과 사회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을 위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기존의 자료를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의 역사를 지녔던 통일 전후의 독일의 문화협정을 토대로 통일 전까지의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의 상호 교류 협력 방안과 도서관 정책 및 제도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연구의 목적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연구는 어떤 분야이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문화와 학술정보의 중추기관이며 사회교육의 장인 도서관의 정책과 제도에 관하여 현재 남북한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후의 일원화된 국가의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구상하고 연구해야 함은 시대적 소명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조국통일을 내다 보면서 현재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도서관 체제 및 정책 현황을 분석 연구하고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의 상호교류를 통일전에 어떻게 유지하고 협력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통일후 어떠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갖추어야 이 첨예한 세계 경제전쟁의 와중에서 민족의 생존권과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를 연구 개발해 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한정된 북한관련 자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통일 전후의 독일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도서관간의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의 사회문화적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독일 통일 전후의 도서관 협력사례를 토대로 남북한의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對 북한 정책모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전해를 제시하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료에 많이 의존하였으며, 정책모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가 입수되므로 제시한 정책모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2. 북한의 도서관 현황과 정책 및 제도 분석

북한사회의 정치 경제체제의 운영 메카니즘은 일상 생활이 이데올로기의 지침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체제의 정통성 확보, 북한주민의 일체감 조성, 대외적 독자성 추구, 김정일 승계체제의 정당화, 대중동원 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하여 항일 혁명전통과 반미주의 및 대남혁명을 연결시킴으로써 사회 전체를 병영화하고 김일성 김정일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함께 북한의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북한은 주체사상의 내용을 보완하여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즉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기하여 수령과 당과 대중이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적 통일체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박영호, 박종철, 1993, 98), 1989년 이후에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체사상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인간의 기본권과 본질적 속성을 왜곡한 북한사회의 전체주의적 특징은 사회에 대한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이 전체주의적 특징과 동원체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민생과 관련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난의 심화로 인한 식량난과 주민폭동, 범죄행위의 증가, 계층간 차별대우와 직업간 편차, 비특권층의 소외감, 신분상승 기회의 제약, 노동기피 현상, 이

기주의적 성향 등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회적 위기감과 현상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협력을 위한 행동을 시도하기에 앞서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공동체성과 고유성 및 다양성과 아울러 사회적 속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1 도서관 현황

2.1.1 도서관의 개념

도서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말 대사전에 따르면 북한의 도서관의 개념은 “책을 비롯한 출판물을 정비, 보관하고 사람들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문화기관이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도서선전과 책읽기 지도를 통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높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문헌재부를 보관 관리하는 중요한 문화기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조선말 대사전 1992, 730).

또한 우리나라의 백과사전과 같은 백과전서에 의하면, “책을 비롯한 출판물들을 수집, 보관, 관리하고 광범한 사회성원들 속에서 책읽기를 조직하는 문화교양기관이며, 3대 혁명수행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교양기관이며, 나라의

귀중한 문헌재부를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는 문화기관이다.”라고 하여(백과사전 2 1983, 198) 비록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표면상 도서관을 크게 문화기관, 사회교육기관, 교양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보, 문화, 교육, 오락의 목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외형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체제구조상 북한의 도서관을 순수한 의미의 교양적, 학술적, 정보적 가치를 갖는 도서관으로 보는 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사실이다.

2.1.2 도서관 자료조직

북한의 자료조직 체계로 사용되는 분류법은 성인공공도서관용의 ‘도서 및 서목분류표’(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 1983)와 학생도서관용의 ‘학생도서관분류표’(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 1983)를 기초로 한다. 대학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이 1980년에 발표한 ‘도서분류표’를 사용하며, 전문도서관용으로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만든 ‘중앙과학기술통보사분류표’가 사용되고 있다(陸榮用 1989, 78)

도서관에서는 도서분류표에서 규정한 체계와 순서에 따라서 책을 서가에 배열하고 독자들에게 소개하며 장서통계를 낸다. 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에서 만든 도서분류표는 차례표, 기본표, 보조기호표, 찾아보기, 사용세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표에는 책들을 사상, 정치적 내용과 과학지식 부문별로 따라 구분하기 위한 항목들이 논리적 순서에 의혀 쓰여 있다. 이 항목들은 그것이 기본표 안에서 차지하는

항목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따라 류문, 강문, 목문, 세목문으로 구분된다(백과전서 2 1983, 199).

목록규칙에는 1984년 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가 제정한 “목록 및 서지기입법”이 있으며 이것은 기본기입방식을 채용한 것인데(高哲義 1987, 455), ‘일본목록규칙’ 신판 예비판의 유니트 카드식 목록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陸榮用 1989, 78).

북한에서 도서관 목록은 그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열람용목록과 사무용목록으로 구분된다. 열람용목록에는 분류목록, 자모순목록, 건명목록, 로작목록이 있는데(백과전서 2 1983, 199) 로작목록은 김일성 저작들에 대해 별도의 목록을 열람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것은 김일성의 저작들에 대해 별도의 목록을 열람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김일성의 저작물 양이 많은 탓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서 김일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가를 가늠할 수 있다.

2.1.3 도서관 운영체제

조선국가교육위원회에서 설립한 도서관지도국은 전국도서관사업을 관리한다. 도서관지도국은 7명의 근무인원이 있는데 주요 임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도서관에 관한 지시, 당과 국가와 연관된 방침정책을 집행에 관철시킨다(鮑振西 1992, 13). 도서관에 관한 설치, 포국, 규정, 규범 등의 법규성 문건을 제정하고, 아울러 감사집행의 상황을 감독한다. 도서관 근무인원에 대해 배양교육을 하는데, 3급에서 6

급의 사서로 심사하여 허가 비준하는데, 도서관의 대외교류업무의 임무를 맡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부와 보통교육부에서는 도서관업무를 관리하는 전문인원을 갖추고 있다. 과학원, 공장기업, 합작농촌, 과학기구의 상급주관부문에는 도서관위원회가 있는데, 그 계통의 도서관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도행정경제위원회에서 교육부를 설립하였고, 시, 군, 구에서 설립한 교육과에서는 본지역의 도서관업무를 관리한다.

도서관지도국에는 도서공급소가 설치되어 있고, 각 도, 시, 군에는 도서공급과가 설치되어 있어 각 도서관에 교육부문의 출판물을 공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기타 출판사가 출판한 도서는 도서관이 여전히 서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도서관지도국의 지휘하에 도서관응용방법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는 원래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연구소였다가 1984년 4월 인민대학습당 개관과 함께 독립하였다. 그 주요 임무는 김일성, 김정일의 도서관사상, 이론과 도서관에 대한 지도사항을 연구하고, 도서관업무의 성과 및 경험, 이를 이론화하는 일을 하며 그 결과를 널리 보급한다. 또한 도서관직원에 대한 재교육을 수행하며, 현장지도를 수행하고 경험을 서로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소에는 50명의 연구원이 있고 학술이론연구실, 방법연구실, 현대화연구실, 자료편집실, 출판실 등 5개의 부서로 나뉘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전의 업무는 도서관관리, 장서설치, 장서이용, 분류 및 편목, 이용자업무, 컴퓨터응용 등이었다(鮑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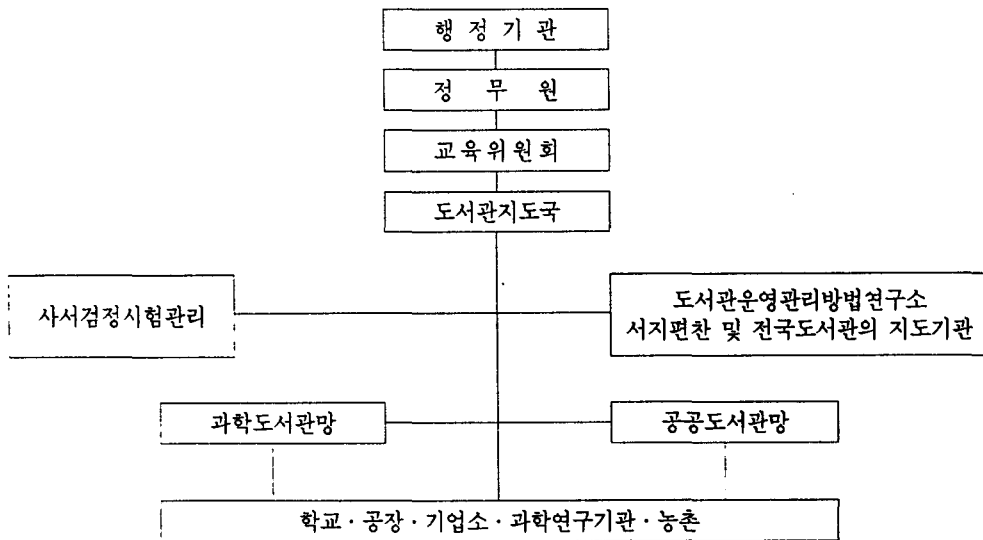
西 1992, 18).

북한의 도서관협회는 1953년에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IFLA에도 가입되었고, 협회 사무국은 평양의 국립중앙도서관내에 있다. 그리고 1992년 6월 7일 북한방송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도, 시, 군 소재지들과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 각급학교 및 농촌에 15,000여개의 도서관(도서실포함)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국민일보, 1992. 6. 15). 또한 최근에는 지방에 인민학습당과 도서관 건립바람이 불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는데, 이는 '은 사회의 인테리화 실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도서관기능을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한상완 1994, 5).

북한의 도서관 운영관리방법연구소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의 연구그룹이 1982년 4월 인민

대학습당 건립과 동시에 독립하여 5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연구소로서 도서잡지연합 목록출판실, 오토메이션화 연구실, 독자봉사연구실, 운영방법연구실, 학술연구실, 출판실을 두고 있다. 이 연구실에서는 「도서잡지 연합목록」, 「잡지기사목록」, 「도서관참고자료(계간)」 등의 각종 서지, 참고자료를 발행하고 있고 전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방법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북한의 도서관은 국내 도서관과 비슷한 업무와 활동을 수행하며 국단위의 주무부서와 산하 연구기관의 설치, 사서자격의 급수제를 실시하는 등 외형적 체계로는 우리나라의 도서관에 비하여 뒤질 것이 없다(송승섭 1994, 156).

<도표 1> 북한의 도서관 운영체제도



자료 : 송승섭, 1994. "북한도서관의 기능과 현황 상." 북한 1월호 : 155.

2.1.4 도서관현황

북한에서는 1961년에 “대중속에 黨과 정권의 정책을 해설, 선전하고 혁명전통을 이어 받은 공산주의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일면, 선진 과학기술을 습득 보급”한다는 구실하에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모든 공장, 기업소에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모든 도, 시 구역에 도서관이 설치하고 있다(정분희 1993, 43).

북한의 도서관 현황에 관하여 1963년에 미국 국회도서관 한국과 책임자인 양기백이 비교적 전반적인 기술을 하고 있어 북한 도서관 체제를 대략 파악할 수는 있으나(Yang 1963, 187-198) 깊이 있는 연구보고는 되지 않으며 시간적인 격차도 있는 글이다. 최근의 자료인 「북한총람」에서 살펴본 북한 도서관 현황은 1964년을 기준으로 178개 도서관에 716만 4천 9백 여권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80년대에 들어와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다른 자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 입수된 내외통신 92년 6월 8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북한은 1992

년 현재 도, 시, 군 소재지들과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 각급학교 및 농촌 등에 15,000여 개의 도서관, 도서관에서는 컴퓨터, VTR 등 현대적인 설비들과 도서들을 구비, 대상별, 직업별 특성에 맞게 과학강의, 새기술강의, 이동강의, 현장강의 등 여러가지 독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방송하였다(양일운 1982, 109).

한편, 中朝兩國文化計劃에 따라 중국도서관 대표단이 1991년 10월 11일에서 11월 23일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방문한 바 있는데 대표단은 중국문화부도서관사부사장 鮑振西를 단장으로 한 다섯명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이 대표단이 방문한 도서관의 견문과 감상을 요약한 것이다(鮑振西 1992, 13).

“조선국가교육위원회 도서관지도국 국장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조선전국에는 각종 유형의 도서관이 7,950개가 있고 총 1억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는데, 그중 공공도서관장서가 1,300여만권, 근무인원이 13,000여명, 그중 공공도서관 인원이 2,500여명이다.”

〈표 2〉 북한의 도서관 개황

도·시·군·구 도서관	470여개
대학도서관	230여개
전과학교도서관	500여개
과학연구기구도서관	100여개
공장, 기업도서관(실)	2500여개
합작농장도서관	400여개
도서, 잡지열람실	150여개

자료 : 鮑振西, 1992.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圖書館事業.” 圖書館建設 69 : 13.

이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으로 보기에 앞서 언급된 여러가지 이유로 제한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혀 근거없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북한의 체제 구조상 도서관의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도서관의 고유 기능보다는 당의 정치 선전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는 제도적 실행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도서관 기능을 행하는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도서관의 외형적 체제를 갖춘 조직으로서 모든 행정구역과 작업장별로 많은 도서관이 분포되어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관종별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공도서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형태와 같은 체제로 북한에는 군중도서관이 있으며 북한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도서관이지만 그 내용이 알려진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다.

군중도서관의 주요 임무는 주체사상으로 독

자를 교육하여 제3차 칠년계획을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의 보급을 실현하고, 도서를 통해 노동자의 문화수준을 제고시켜서 노동자에게 정신문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鮑振西 1992, 14). 다음은 도, 시, 군, 구 도서관의 기준이다.

한편 도도서관 건축면적은 건축면적이 3,000m² 이었는데 이 공간으로는 부족하여 15,000m²로 확장할 계획이다. 시, 군, 구 도서관도 3,000m²로 확장할 것이다. 학생도서관(실)은 일반적으로 모두 구도서관의 분관으로 건축면적은 약 100m²이다.

다음은 鮑振西의 북한방문기록에 나타나 있는 군중도서관의 사례이다(鮑振西 1992, 17).

① 순천시도서관

이 도서관은 1948년 10월에 건립되었고, 건립 초기 규모는 총 500m²였다. 1982년 신관을 건립하였는데 면적은 2,200m²가 된다. 현재 장서 35만권이 있고 그중 외국도서관가 5만권이다. 중국, 소련의 정기간행물은 500여종이다. 매년 1,200~1,500명의 이용자들이 이용한다. 사서는 13명이 있는데 기사로 지칭되고, 매년

<표 3> 북한의 도·시·군·구 도서관기준

	장 서	근무인원	경 비	건축면적
도 도서관	30-40만권	20-25명	15만원/년	3000m ²
시 도서관	5-10만권	5-7명	4만원/년	1500m ²
군 도서관	5-10만권	5-7명	4만원/년	1500m ²
구 도서관	5-10만권	5-7명	4만원/년	1500m ²
학생도서관(실)	2-3만권	5-6명		

자료 : 鮑振西. 1992.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的圖書館事業" 圖書館建設 69 : 14.

경비는 9만원이며, 그중 도서구입비가 67,000원이다. 매년 신간이 35,000권이 입수되고 있으며 독자는 국민학생부터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오전 9시에 개관하여 오후 6시에 폐관하며 일요일에도 정상개관한다.

사회과학열람실, 자연과학열람실, 외국어도서열람실, 대학생열람실, 학생열람실, 외부대출실, 김일성 저작서고, 방영실과 교실이다. 방영실은 주로 한글로 번역된 세계 과학기술 발전 추세의 과학편을 매일 23회 방영하며 40여명을 수용한다. 교실에는 600여 좌석이 있으며, 녹음테이프를 인민대학습당으로부터 제공받아 항상 녹음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② 모란봉구도서관

이 도서관은 1961년에 설립되었다. 관내에는 4개의 열람실이 설치되어 있다. 장서는 10만권이고, 사서직원이 14명, 매년 15에서 20만명의 이용자에게 봉사하고 있다. 4개의 도서잡지열람실이 설치되어 있고, 연경비는 5만원, 연신간 10,000종, 정기간행물 105종과 신문 30종을 구독한다. 관내에는 사회과학열람실, 자연과학열람실, 인민학생열람실과 중학생열람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같은 북한의 공공도서관의 특징에 대해서 송승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공공도서관은 국가 지휘체제로 도서관망이 조직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성인용, 학생용, 아동용도서관 및 이동도서관형식의 분관도서관이 지역행정구역 단위로 연계되어 조직되어 있다. 둘째, 북한의 공공도서관은 당의 이념과 김일성 유일사상의 선전기관으로

서의 역할과 생산증가를 위한 학습에 초점을 맞춘 사회교육기관으로, 외형적 조건이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과 큰 차이가 없으나 대민봉사 차원에서 보면 일부 분 우리나라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송승섭 1994, 149).

(2) 대학도서관

북한에는 1960년 10월 20일 개관한 것으로 알려진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도서관이 대표적인 대학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는 14학부 90여개 강좌, 8 연구소와 대학원이 있는데 50여개 학과의 야간 - 통신학부 5,000여명을 제외하면 학생수는 총 12,000여명이며, 1,200여명의 교수와 3,500여명의 직원이 있다. 모든 대학이 정무원 교육위원회 산하 고등교육부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는데 비해 이 대학만은 정무원의 직접 관리를 받는다. 도서관은 1946년 대학 창립과 같이 개관하였으며 1,000석의 열람석과 200만책의 소장능력을 가진 4층 건물이다(정분희 1993, 52). 북한의 과학문헌기지의 성격을 갖는 대학도서관으로 장서는 과학관계분야의 서적은 중심으로 약 200만권이 구비되어 있으나 사상, 문학, 철학 등의 도서는 극히 적으며 김일성노작과 공산주의 서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시설규모는 일시에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口' 자형으로 건축되었고 관 내에서의 도서열람외에 대출, 독자모임, 참고문헌 발행 등의 사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육하는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북한총람 1983, 1212).

鮑振西의 방문기에 따르면 김일성 종합대학은 1946년 10월 1일 건립되었다고 한다. 현재 15개 계열에 110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10개 연구소와 90개 연구실이 있다. 학생수는 모두 12,000명이고 교직원이 5,000명, 그중 교원은 1,200명, 대학원생 800명, 사서 관리요원 300명이다. 박사과정도 설치되어 있다. 학제는 문과 4년, 자연과학은 5년이며, 현재 중국, 소련, 일본, 월남, 독일, 이란 등의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다(鮑振西 1992, 17).

(3) 국가중앙도서관

①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의 국립중앙도서관은 1946년 10월 13일에 창설되었다는 견해와 1948년 11월 27일 평양도서관 자리에 간판만을 바꾸어 달았다는 주장으로 보아 1946년에 평양도서관으로 창설된 것을 1948년 명칭만 개칭하여 중앙도서관으로 재개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기록은 1975년까지만 유지되었고, 그 이후의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송승섭 1994, 143).

625 동란으로 이 도서관은 70,500권의 장서가 소실되었다고 하며, 전후에 3층 건물로 복구하여 1954년 8월 14일에 다시 문을 개관하였다. 1958년에 들어서 신관을 증축하여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약 1,800 m²로 넓혔다고 한다. 이때에 수집된 자료는 주로 중공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四庫全書]를 비롯한 1960권의 기증자료와 소련으로부터 받은 전후 경제복구를 위한 공학도서 등이다(양일운

1982, 110).

특히 1982년 인민대학습당이 창설되어 실제적인 국가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전효과와 극대화 차원에서 외부적인 홍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기관 및 단체별 인명집에 보면 중앙도서관 관장과 사서장의 이름이 여전히 기록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도서관의 폐지나 개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송승섭 1994, 143).

② 인민대학습당

북한이 세계 최고의 도서관으로 자랑하고 있는 인민대학습당에 대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먼저 高哲義의 방문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高哲義 1987, 456).

“金日成 주석의 70회 생일인 1982년 4월에 개관, 연면적 104,000m² 학습당, 단일한 도서관으로서 전사회의 인텔리화의 중심기지이며, 근로자의 통신종합대학적 교육의 장이다. 600실 5,000석의 열람실, 3천만권의 장서능력, 200명의 번역집단, 최신의 과학기술정보를 모은 정보센터, 기초과학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강의실, 외국의 기술도서를 테이프에 번역녹취하여 테이프와 도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녹음 강의실, 음악감상이 가능한 스테레오장치 30대를 갖춘 음악강의실 등 교육적 기능을 갖춘 많은 학습실, 강의실이 완비, 200명의 강사와 800명의 사서가 교대제로 야간, 일요일에도 개관하고 있다.

이용자는 목록을 보고 도서를 검색, 1979년 이후 출판서적은 열람실에서, 이전의 자료는

대출대에 청구, 전산기로 서고 내로 연락하며 관성식 원격도서반장치를 움직여서 이용한다. 인민대학습당에는 지방의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도서자료를 단체 및 개인에게 장 기대출하여 주고, 시내에 호텔을 완비, 지방이 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986년에는 연간 열람객수가 160만명, 1,048개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인민대학습당은 세계 110개국, 10,000개에 달하는 도서관, 연구소, 국제기구와 교류 관계를 가져 국제교류문화교류에 일역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1991년에 중국대표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鮑振西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鮑振西 1992, 14).

“인민대학습당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건립한 것으로, 조선 당과 정부의 교육에 대한 중시를 실현하고 있으며, 조선에서는 이미 취학전 교육, 전일제 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및 간부의 교대훈련제도를 포함하는 교육 체계를 세웠다. 조선이 매년 교육에 쓰는 비용은 국가 재정지출의 약 18%를 점한다고 한다. 인민대학습당은 도서관일뿐 아니라 광대한 인민대중에게 정치이론, 과학 및 문화지식의 학습을 제공하는 장소이고, 계속된 교육과 지식 갱신을 진행하는 사회교육기지이다. 인민대학습당은 매일 연인원 8,000-10,000명의 독자를 받는다.”

인민대학습당은 정무원이 직접 지도한다. 총장 1명, 부총장 4명을 두고 교육, 번역, 과학 및 도서관리업무를 나누어 관리한다. 기구설치는 교육국, 번역국, 출판국, 목록통보처, 과학연구처, 녹음처, 도서목록취체처, 도서관리처,

도서대출처, 국제교환처, 대외업무처 그리고 후방근무 관리부 등이다. 직원은 모두 1,000여 명으로 교원, 과학연구원이 250명인데 그중의 40%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한편 인민대학습당의 전문직종은 5급으로 나뉜다. 그들의 재직조건과 임금현황은 아래와 같다. 뛰어난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민사서, 또는 공훈사서의 칭호를 준다. 인민사서는 1급사서에 해당하고 공훈사서는 2급사서에 해당한다. 인민대학습당에 현재 인민사서와 공훈사서 칭호를 받은 사람은 20여명이 있다. 한 등급은 3년마다 한차례 시험을 치루는데 합격자는 일반적으로 승진하고 시험위원회가 주관한다. 인민대학습당 고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모두 1급사서이다. 시험과목은 도서관학, 목록학, 외국어, 그리고 업무성적의 심사가 포함된다(鮑振西 1992, 15).

운영내용 및 기타 봉사활동에 대해서 백과전서를 살펴보면, “인민대학습당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문헌기지이다. 인민대학습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관리운영방법에 의거하여 있는 배움의 전당이다. 인민대학습당에는 강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통보(일정한 부분의 자료나 소식을 통지하여 보고하거나 알리는 것을 말함, 출처 : 조선말대사전 1984, 731), 문답, 녹음강의, 열람을 배합하고 있다. 인민대학습당에서는 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새로운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가지고 매일 강의하며, 과학이론강연, 과학기술강습, 집중강의, 외국어강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예정된 강의소식을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전국

의 근로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인민대학습당에서는 열람뿐만 아니라 대출, 통신대출, 이동문고 등을 널리 조직하여 책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고 있으며, 큰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 나가 현장강의, 새기술통보 등 현장강의, 새 기술통보 등 현장 봉사사업을 진행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백과전서 6 1984, 696). 인민대학습당은 전산화가 되어 있고 각종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어 맨 윗층인 8층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가 1층까지 도달하는데 10분 이내에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민대학습당은 성격상 사회종합교육시설이며 북한의 대표적인 도서관이라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사상의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세계 각국의 도서관 및 연구소들과 국제적인 교류를 갖고 있으므로 남한이 북한과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 및 정보자료 교류를 하고자 할 때, 북한측에 대표적인 창구가 될 것이다.

2.1.5 사서 양성제도

도서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인 사서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1976년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어문학부 도서관학과에서 사서를 양성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송승섭 1994, 152), 그 후 등급제를 도입하여 현장에서의 실무와 학습을 병행하였다. 한편 小實田의 북한방문기록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사회과학계열에 신문도서관학과가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정원과

졸업생수, 교과목에 관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 통신대학을 포함하여 주야간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양일운 1982, 113-114). 그러나 중국의 鮑振西가 비교적 최근인 1991년에 북한의 도서관계를 방문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많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문화학과내에 도서관학 전공이 있다. 이 전공은 1966년부터 개설되었다가 1976년에 일시 폐과되었으며, 1987년에 재창설되었다. 현재 60명의 학생이 있으며, 학제는 4년이고 현재 3개 분반이 있다. 6명의 교수가 담당하며 전공 과정으로는 도서관학, 목록학, 분류학, 서목통보학 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金順子 1989, 59 ; 鮑振西 1992, 18).

현재의 사서자격은 급수제로 이루어져 있고 매년 검정시험을 실시하며 사서 검정수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高哲義 1987, 455 ; 陸榮用 1989 78).

1급 : 3개국어를 습득하고 박사, 교수의 자격을 갖춘자.

2급 : 3개국어를 반드시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3급 : 2개국어를 반드시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4급 : 5급 또는 6급의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5급 : 4년제 또는 5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여야 한다.

6급 : 고등학교 졸업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또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이 질적인 대비평가가 곤란하기는 하지만 북한의 도서관은 군중문화 활동의 대중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도서관의 설치와 조직화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서관 경영의 질적 수준도 상당 부분 발전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서의 검정 수험자격은 국내의 사서자격이 근무경력 과 학위 구분을 중시한데 비하여 외국어능력과 실무능력을 높이 사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사서의 자격 조건도 세분화되어 있어 사서의 자격기준에 대한 공정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송승섭 1994, 156). 한편 인민대학습당의 경우는 이를 교육기관으로 간주하면서 사서의 교수자격을 요구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2.1.6 도서관 봉사활동

우리나라에서의 도서관 봉사활동과 북한에서의 봉사활동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다음에 예시한 高哲義의 방문기록을 통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高哲義 1987, 455).

“공화국에서는 생산과 학습 등에 있어서의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각종 도서관이 밀접하게 제휴하고, 대중의 중심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현장봉사활동을 차례대로 전개하고 있다. 현장 봉사활동에는 각 도서관과 공장, 기업소 등의 담당지역을 갖고, 당지 도서실과 제휴한 리퀘스트를 받아, 도서를 보급하는 활동을 한다. 함경북도 도서관에서는 1984년에 100여회의 현장봉사를 하여 1천여권의 과학기술도서를 보급, 215건의 기술혁신안의 도입에 일역을 하고, 평안남도 도서관

에서는 도내 주요 공업지구에 있는 순천지구, 안주지구, 북창지구, 덕천지구 등 35개소를 담당, 지난 1년간 22건의 기술혁신안을 완성, 6,600공정의 노력을 절약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도서관원 등은 현장에서 리퀘스트를 받아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운곡노동자구 도서관의 박경실 사서는 어느 탄광노동자로부터 「권장기운전공」이라는 잡지의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그날로 구입하여 광도 깊숙이서 일하고 있는 독자에게 제공하였다. 다른 도서관원 등은 리퀘스트를 받은 물건이 소장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서 봉사한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도서실에서는 지난 1월부터 7월 사이에 인민대학습당과 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200여권의 도서와 600여권의 잡지를 차입하여 봉사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도서관에서는 관내 열람사업과 관외 대출사업을 활발히 벌이면서 통신대출, 이동문고, 현장봉사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생산과 학습 등에 있어서의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도서관이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현장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장봉사활동은 각 도서관이 공장, 기업소 등의 담당지를 가지고 그곳의 도서실과 연계하여 도서를 보급하는 활동이다. 특이한 점은 김일성노작표모임, 노작해설강의, 토론회, 감상모임회, 독보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을 널리 해설, 선전하며, 과학기술자료의 안내와 통보

사업을 통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있다(백과전서 2 1983, 198-199).

2.2 출판 현황

북한의 출판물에 대한 인식은 인민대중들을 선전선동하는 무기라고 본다. 즉 그들은 '혁명 투쟁의 유력한 사상적 무기'로서의 출판물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보아서도 분명하다(윤재근 등 1991, 68).

오늘날 북한의 출판 정책은 김일성의 유일사상인 혁명과 주체사상을 인민들에게 교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는데 기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출판물은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路线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해설 선정"하여 온 인민들을 "수령에 대한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준비시키며 나아가서 전 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윤재근 등 1991, 69).

따라서 북한에서는 출판물을 철저히 김일성 유일사상과 당정책의 선전선동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모든 출판사는 정무원 산하 선전선동부의 출판총국에 의해 통제되고 출판물도 기획에서 배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단일한 체계속에 통제되고 있다. 따라서 출판사의 설립은 물론 출판물의 발행이 모두 당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은 철

저하고도 엄격한 통제와 검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열은 표면적으로 출판총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외에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출판과에서도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 중앙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열과정은 먼저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원고의 검토와 교정 등 일차 검열을 거친 다음 출판총국으로 넘겨 최종 검열을 받는다. 출판총국에서는 해당 원고를 검열 원칙에 따라 검열하면서 필요한 경우 저자나 출판사 직원을 수시로 불러서 문제점과 의문점을 질의 또는 추궁한다.

검열기준은 내용이 당의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김일성 유일사상의 반영여부,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에 도움을 주는지의 여부 등을 검열한다.

현재 북한에는 모두 몇개의 출판사가 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의 자료들에 의하면 3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4〉 북한의 출판사 현황

출판사명	기 능
조선로동당 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 조선로동당 문헌 - 김일성 노작, 당 건설문헌 - 대남관계 서적 - 당원교양자료, 강연자료 - 국제 노동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문제 - 각국 공산당의 사업경험 소개
근로단체 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맹원을 위한 이론, 실무서적 및 천리마 운동에 관한 서적, 노동보호에 관한 서적, 잡지 '로동자' 발간 - 청소년을 위한 공산주의 교양서적 - 잡지 '조선녀성'과 자녀교양 및 양육, 가정생활 지식, 여성의 문화적 소양을 제고키 위한 도서자료
근로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지 '근로자' 발간 - 상기 '로동당출판사' 업무대행
학생소년 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지 '새세대', '새희망', '소년신문' 출판 - 기구 : 소년신문 편집부, 새세대 편집부, 도서편집부, 새희망편집부
아동도서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문학 도서출판, 기타 공산위성국 아동문학 번역 출판
직업동맹 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단체 사업과 직맹원 교양을 위한 도서, 노동자의 경험 보급을 위한 도서, 노동 보호에 관한 도서 출판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원통보', '역사과학', '육편', '학술용어', '분석화학', '수학과 물리', '사회과학' - 과학원 각 연구소의 연구 성과에 기초한 이론서적과 민족고전 출판
의학·과학 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보건에 관한 이론서적 - 의학 고전 및 동의학 서적 출판 - 잡지 '주체의학' 출판
체신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신우표', '조선우표'지 출판 - 체신부분 일꾼들을 위한 기술도서 출판
건설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에 대한 기술이론 도서, 기술 표 및 전제연구통보 출판
수산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분야의 도서출판
경제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잡지 출판
농업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농장의 관리 운영, 농산, 수의, 축산, 산림 및 농촌기계화 관계에 관한 이론도서와 통속도서 출판 - 잡지 '농업기술', '수의축산' 출판
공업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공업, 지질 및 공업잡지 발행 - 각 분야의 기술이론 도서 및 대중 생산기술 보급도서 출판 - 잡지 '방직공업', '식료공업'과 경공업 건설 주필 및 편집부, 수산주필, 바다편집부, 금속·광업 편집부, 편집조직처, 자료조사부, 출판처

출판사명	기 능
국립공업기술도서출판사	- 공업분야의 전문도서, 신기술 도입 선전 및 경험을 보급하는 도서 출판
문예출판사	- 고전·현대문학, 음악, 미술 도서 - 공산국 및 기타국의 진보적 고전 및 현대문학, 예술작품을 번역 출판 - 잡지 '조선문학', '조선미술', '조선음악', '조선예술', '조선영화', '천리마' 발간
군중문화출판사	- 씨클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 - 과학지식 보급을 위한 강연자료 - 정치포스터, 사진전 및 화보, 그림 연극출판 - 잡지 '씨클원문예' 출판 - 대중역사, 지리도서, 군중문화도서, 영화선전물 출판 - 기구 : 문화도서편집부, 대중문예 편집부, 과학도서 편집부, 직관물도서 편집부
교육도서출판사	- 교육기관의 교과서 출판 - 교원의 교양 참고서 및 경험집, 기타 보조용 도서출판
조선출판사	- 노어보급도서, 소련을 소개하는 도서 및 정기간행물 출판
국립문예학술서적출판사	- 소련 고전문학 및 근대문학작품 번역출판
작가동맹출판사	- 고전문학 및 현대문학작품들과 평론작품 출판
조선음악사	- 음악평론 및 이론서적 잡지 출판
미술출판사	- 고전 및 현대의 각종 미술품 복사 발행, 초상화, 포스터 발행
선동원사	- '선동원', '화살' 출판
조선녀상사	- 여성 사회 문예도서 출판
외국문종합출판사	- 소·중·영·일·불·서반아어로 다음 내용의 책자발간 ①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의 경험 ② 노동당의 혁명전통 ③ 평화통일을 위한 노동당의 정책 및 그 실현을 위한 투쟁모습 ④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연속화정책과 이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모습' ⑤ 노동당의 해외 활동과 이에서 이룩한 성과 - 북한제도의 우월성 과시 - 북한의 역사, 지리, 문화, 사회, 정치, 문화생활 내용 소개
조국통일사	- 대남 흑색선전 간행물 출판 - 기구 : 제1편집국, 제2편집국, 제3편집국

자료 : 북한총람. 1983. 서울 : 북한연구소 1193-1194.

3. 독일 통일 전후의 도서관협력 사례와 정책

통일 전후의 동독과 서독간의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의 발전과정 및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남북한 간에 있어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 문제도 안까지 언급조차 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앞으로의 교류 가능성과 더불어,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 장에서는 동서독간의 문화교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넓은 의미에서 도서관 협력과 관련이 있는 출판물 분야, 학술분야의 협력사례를 도서관분야와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3.1 문화협력

1972년 6월 양독간의 기본조약 체결 이전까지의 문화교류 특징은 주로 민간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져 왔으며, 정치와 엄격히 분리되어 행해졌으며, 동독정부가 정치적으로 이를 악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다가 기본조약체결로 문화교류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1986년 5월 6일 기본조약체결 14년만에 문화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베를린에서 전문 15개조로 된 양국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서독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신용철 1990, 156). 이 문화협정에는 문학, 미술, 음악, 영화, 학술, 교육, 도서, 출판, 방송, 체육, 청소년 문제 등 포괄적인 분야가 망라되

어 있으며, 특히 문화원, 도서관 등의 교환설치도 포함되어 있고, 관청, 국여기관, 조직, 협회 등의 공공기관과 함께 ‘문화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교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어 양독간의 이념차이와 이질감의 해소에 적지않게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통일원 1992, 248).

결국 문화협정 결과로 양독간의 협력관계가 개선, 발전, 촉진되었으며 그 결과 학자, 학생, 정보, 문화교류를 통한 교육과 학술분야의 협력, 상호행사 및 축제참가를 통한 미술, 영화, 문학, 음악, 언어, 박물관제도, 기념물보호 등에 관한 협력, 방송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등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3.2 도서관계의 협력

다음은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관, 출판, 학술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분야별로 나누어 양국 문화분야의 교류 및 협력관계의 기본틀을 정한다고 볼 수 있는 ‘문화협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86년 5월에 체결된 문화협정 조항 가운데 광의의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5조 출판물 분야, 제6조 도서관 분야, 제7조 문서분야, 제8조 학술회의, 제9조 상호 정보교환 등 5개 조항이 이에 해당된다.

3.2.1 도서관 교류

문화협정 제6조에는 협정당사국인 동서독의

도서관분야의 협력문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간의 문화협정과 관련되어 연구된 것에 도서관 및 정보자료교류에 관한 항목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정분희 1993, 9).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한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통일원 1993, 848).

첫째, 국제적인 출판물교류의 확대, 둘째, 다양한 협력의 테두리 내에서의 독일어권 국가들을 위해 문헌목록을 작성하는 규칙을 세우고 또 그것을 개정하는 데 대한 협력의 확대, 또한 협정 당사국들은 대출교류의 확대와 참고서목 및 그 밖의 정보자료들의 교환, 도서관 분야에 있어서 비상업적 전시회의 교류, 정보자료교류, 특히 국제관계의 전문회의의 참여를 통한 협력을 촉진시킨다고 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협정 조항안에 연구활동의 기본이 되는 자료의 상호대출교류를 기존에 해오던 것보다 더욱 확대시키고 소장자료의 현황 파악 및 참고를 위한 2차 자료를 비롯한 각종 참고서지 교환, 도서전시회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협정이전에 1972년 양동 정부가 체결한 기본 조약 속에 '정보교환'의 조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조약 이전에 이미 양측 출판사들은 자발적으로 라이프찌히에 소재한 동독국립중앙도서관과 프랑크푸르트 서독국립중앙도서관의 신간 서적을 교환하여 양국간의 국가서지에 기록하도록 협조하고 있었다. 학위논문 역시 1951년 서독 사서협회의 권고사항에 준하여 각 대학간의 협정이래

국립도서관에서 동서독 학위논문 수집을 책임지고 있었다(노문자 1986, 13-15).

동서독의 대학부설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은 상호대출은 물론 각기 속한 동서진영으로부터 서적과 연구결과를 중개해주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분단이라는 상황하에서 바람직한 학술교류로 평가된다. 양독 학술도서관 사이의 대출은 비교적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립문서실 분야는 제한되었다.

3.2.2 출판물 협력

문화협정 제5조에는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내에서 출판분야의 협력을 촉진시키며, 협정당사국들은 다음의 내용을 장려했다(통일원 1990, 848).

첫째, 상업적인 문헌교류의 테두리안에서 출판물의 보급 및 수입의 확대, 둘째, 어느 한 쪽이나 쌍방간에 있어 중요한 정보상의 이익 및 학문상의 이익이 되는 출판물의 간행, 셋째, 인가에 대한 양측의 위탁의 확대, 넷째, 도서전시회 개최에의 참여이다. 물론 문화협정 체결 이전에도 동독의 대부분의 베스트셀러 작품과 사회주의적 현대소설류의 유명서적들이 허가판/Licensed edition 으로 서독의 출판업계에 의해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동독에서는 서독작가의 동시대 작품이 거의 허가판으로 출간되지 않았다.

전문서적 분야에서 동서독 출판계는 공공출판계획으로 부터 판매계약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의 협동출판을 도모해 왔다. 서적판매관계는 통화개혁 이후 교역의 일부로서 제도화되어 있다.

동서독간의 출판물교류, 즉 학술서적, 전문서적, 문학서적, 오락서적의 상호교류는 분단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출판물의 상호교류는 기증형태나 서적상을 통한 內獨交易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동서독에서 출판되는 모든 서적은 납품제에 의하여 상호 송부하여 주며 서독에서 출판되는 모든 서적은 라이프찌히 독일도서관과 동베를린 독일도서관에 증정본과 편찬서를 송부하며, 동독출판물들은 프랑크푸르트도서관에서 기증받아 서독 내 각 도서관에 배포하는 형태의 교류도 이루어졌다(통일원 1992, 239-241).

또한 동서독은 정치와 이데올로기 분야가 아닌 자연과학 분야의 학술지 및 연구논총, 사전류 등을 공동으로 발간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출판비용은 서독에서 부담하였다. 양독간의 서적교류에 있어서도 교양도서, 일간신문, 전문잡지 등의 교류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나, 이데올로기 성향이 강한 전문서적 등의 교류는 대부분 억제되었다(정분희 1993, 23).

3.2.3 학술 연구 교류

1986년 문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학술분야의 교류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문화협정' 제 8조에 따르면 "협정당사국들의 해당 국가기관들은 중요한 회의나 회담, 토론회, 축제, 기념행사, 기념축제행사 및 학술회의 등에 대해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협정당사국들은 기존의 이해에 기초하여 학자들, 예술창조자들,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종류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고 되어 있다. 학술분

야에 있어서의 교류는 문화협정 이후 서독의 학자나 연구자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이므로 급속히 발전되기 시작하였다(통일원 1990, 849).

이러한 문화협정의 수행으로 1987년 9월 8일 베를린에서 학문·기술 협정/WTZ-Abkommen 을 맺게 되었다. 협정의 공식명칭은 '동서독 정부간의 학문과 기술분야에 대한 협력을 위한 협정으로, 이 협정에 따라 협력분야에서는 자연과학, 기술과학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다음으로 인문과학, 사회과학분야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 조약은 모두 8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를 보면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는 학문과 기술에 대한 양측의 이용, 협력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 것이며 상응하는 계획과 조치에 합의하고 그의 수행을 지원한다"고 하였다(신용철 1990, 16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서독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분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자료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그들이 겪고 있는 교류협력의 문제점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은 도서관분야의 교류가 아직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3 통일을 대비한 동서독 도서관의 정책

1990년 6월 동서독 도서관 당국자들은 통일을 대비하여 전문가 그룹과 함께 모여 수립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상호 유익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29명의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학자들이 참여하였다(노문자 1993, 16).

이 보고서에서의 구체적인 안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동독도서관의 법적인 보장
- ② 단기간의 보조 프로그램과 장기적 도서관 구조조정
- ③ 기본장서의 개발
- ④ 도서관 예산모델, 도서관 기준과 표준치의 발전안
- ⑤ 도서관 건축과 유지보수의 보조프로그램
- ⑥ 사서, 정보전문가 교육의 새 개정안
- ⑦ 공공도서관의 존재의식의 필요성과 발전안
- ⑧ 지역적, 전국적 도서관 서비스의 협력 위와 같은 안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은 다시 3개 분과 형식의 전문가그룹을 결성하였다. 5개의 전문가 그룹은

- 1. 공공도서관

1.1 공공도서관 구조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행정체계 정립, 혼란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임시규정, 지역적전국적 구조 확충, 새로운 주정부 헌법에 도서관은 각 주의 의무조항으로 삽입·촉진, 중앙집권식 예산책정을 주정부의 시와 다른 하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위임.

1.2 직원문제

정치적으로 배속된 직원과 정년퇴임 후에도 업무를 계속했던 직원들의 해고, 공공도서관 폐쇄로 인해 발생한 사고,

각 부서의 변화, 예산의 불확실성과 예산삭감에 따른 지속적인 직원의 해고

1.3 기타문제

- 2. 도서관 직원과 교육
- 3. 학술도서관과 자료제공서비스
- 3.1 기본장서구입 프로젝트
- 3.2 지역도서관/Regional library
- 4. 지역적, 전국적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중앙기수
- 4.1 협동체계의 구축
- 4.2 네트워크
- 5. 도서관 시설과 현대화의 정보기술
- 6. 도서관 조직과 법적문제

이 6개의 전문가 그룹이 다시 각 해당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놓았다. 이러한 계획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동안 연방정부에서는 첫번째 즉석보조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동독 대학생들의 학업에 가장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기본적인 학술서적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는 15 Mio DM(약75억)을 출자하였다. 이 작업은 베를린의 독일도서관연구소의 주관하에 집행되었으며 후에는 해당 전문가 그룹과 상의하여 어떤 분야의 어떤 도서를 선정하여 어느 도서관에 배당하는가에 대한 제반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동안에 전문가 그룹은 2번째 회의 후에 권고안의 초안을 작성하여 1990년 10월에는 동독도서관을 위한 단축권고안이 나오고, 그 후부터는 각 분과단위의 전문가그룹에서 분야별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4. 통일대비 도서관 정책과 제도 개발 모형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갈 수 있는 부문별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교류의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국가적 최대 현안이었던 북한 핵문제도 순조롭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 당국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쌀을 좋은 조건으로 제공하는 계기까지 마련하고 있다. 도서관계에서도 남북간 도서관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의 도서관은 기반과 제도, 방법과 성격, 목적과 이념, 성장과정과 생명력 등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도서관이 집단의 이념성에 근거하여 목적론적 차원에서 그 역할과 의미를 강조해 왔다면, 남한의 도서관은 필요론적 요건과 가치론의 요건을 민주주의적 자유 이념과 사회교육적 이념을 그 기본 개념으로 동시에 주장해 온 셈이다. 이같은 차이는 결국 우리 민족의 도서관계가 체제와 이념의 논리, 필연성과 목적성의 논리에 의해 상당히 큰 편차 속에서 양분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도서관의 교류와 이를 토대로 한 통일형 도서관정책과 제도를 확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같은 심각한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절대적인 명제라 아니할 수 없다. 남북도서관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사의 차원에서 남북도서관의 전체적인 의미를 논하기

위해서는 남북도서관의 교류가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는 민족의 동질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치이념의 차원에서 보여주는 불신과 분단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도서관의 교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치성의 배제라는 것도 그 자체가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방과 접근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 개발은 통합흡수형과 병존협력형의 2가지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통합 흡수형

분단의 상황에 대처하고 현실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통한 통일과 본질성의 회복을 달성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편향적인 배타성의 관점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배타성향은 통합론적인 관점으로 전환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통합적인 관점은 결국 사회적인 문화현상으로 도서관현상을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의 확대와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도서관현상에 포함된 문화현상을 지적탐구의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도 안되며 이념적 속성에 얽매어 편협된 논리로 해석하는 불행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의 도서관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배타성과 양극화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선적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기초로 이념성의 문제

에 어느 정도까지 탄력성있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상대적 폐쇄성 위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개방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북한의 경우 이념적 대결구도를 반세기 이상 지속시켜오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을 설정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문화현상에 있어서 두개의 서로 다른 이질체의 통합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은 지배모델과 상호의존모델이 있는데(조성진 1992, 239) 지배모델의 가장 현실적인 사례는 동서독의 통합을 보는 관점인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모델에 통합 흡수형이라고 하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통합흡수형의 개념은 어느 일방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통합의 과정 자체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혼란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남북한의 경우 이같은 모델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이 모델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 만은 아니다.

(2) 병존 협력형

오히려 남북한의 경우에는 상호의존 모델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다. 남북한은 대립과 경쟁 가운데서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립을 지양하고 체제경쟁을 종식시킬 경우 남북한 문화현상의 하나인 도서관문화가 반드시 정치적 이념적 논리에 따라 양분될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통일

전의 남북도서관계는 상호의존적 협력관계 즉 병존협력형의 개념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협조체제에 기반하여 갈등과 혼란을 극소화한 병존협력형의 상호교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4.1 통일전 선 협력구도의 마련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한반도에서의 협력은 물론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협력을 제도화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전반적인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보조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를 지닌다. 기본합의서 제21조의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라는 규정은 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서로 지원 협조하고 해당사업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남북한 상호간의 협력은 ① 남북 상호간의 정보교환, ② 상호지원 및 역무의 제공, ③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의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한상완 1994, 9). 남북한의 협력은 통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선린관계 유지가 자국에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남북한간의 정치적 전략적 협력증진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남북한 협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협력단절로 인한 비용이 협력지속으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한상완 1994, 9).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하여 통독 전후의 도서관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례와 남 북한의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남북한간 사회문화분야 교류의 일환으로써 도서관 협력의 필요성 및 의의와 구체적인 교류협력방안을 정책 측면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한간의 도서관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통일이후 도서관 및 정보부문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치적 통일과 동시에 지난 50년에 걸친 단절과 이질화를 극복하고 21세기와 세계의 변화하는 환경을 극복해 내는 실질적 의미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1.1 협력방안

남북한 교류는 분단된 민족이 반드시 거쳐야 할 역사적, 사회적 산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때문에 교류방안의 모색도 첫째, 역사적 경험에 바탕해야 하며, 둘째, 사회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통일(이상)실현에의 접근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1992년 5월에 개최된 제7차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한은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 산하에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교류협력 분야의 단일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8차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의 경직된 남북의 정치상황과 핵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국내외의 정치적 사정으로 말

미암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도 지연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언론 방송교류 및 인적교류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직접적으로 북한사회에 미칠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은 기술과학, 순수학문분야, 전통예술 및 순수예술, 민속학 등 비정치적이고 비이념적인 분야부터 제한적으로 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 문제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협력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접촉장구 문제가 심각한 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이것은 남북한 양측이 민족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한다면 그다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한간 도서관분야의 상호협력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구가 필요하다. 즉, 핵심요소인 남북도서관협력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책임이 있는 해당부서 차관급 이상의 인사와 문헌정보학 학자 및 도서관 실무담당자로 이루어진 남북 도서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위원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소화시키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양측 협의하에 주어진 기간 임기제로 임명하고 이 위원회는 도서관 상호협력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주도, 관할하고 심의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협력을 위한 창구로는 양측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결정하며 양측 국가대표도서관에 실무자를 파견하여 협력업무를 보조하게

한다. 그리하여 상호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공동 세미나 및 연수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협력에 필요한 통신 및 교통의 편의를 제공한다. 교류된 정보에 대하여 양측 모두 검열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남북 도서관협력이 이루어지면 국가대표도서관은 각측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민이 이용하게 된다. 여기에서 교환된 정보이용의 단계별 이용론은 정보공개와 차별성이 국민계층간에 위화감과 조작의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소망스럽지 못하다.

둘째, 문화협정을 체결함과 아울러 협정내용에 도서관분야 교류협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문화교류는 민족의식의 동질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치이념의 차원에서 보여주는 분단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문화교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성의 배제라는 것도 그 자체가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방과 접근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교류는 비정치적인 성격을 띠지만 이념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다. 동서독과 남북한의 경우를 비교하면 동서독은 경제협정, 교통협정, 정상회담 등 정치, 경제, 사회의 협상이 이루어진 후에 문화협정이 이루어졌으나, 남북한은 정치, 경제 등 다른분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협정이 거론되는데, 이것은 남북한 상호 비정치적인 학술, 과학, 기술, 정보교환이 도서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정치적인 통합으로 진

전되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협정 당사자인 북한의 경우를 살펴보면, 평양에서 발간된 '법학사전'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라는 항목에는 '교육, 문화, 체육, 출판, 보도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서로 교환하고 상호 협조할 목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맺는 조약'이라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에는 문화분야에서의 국가들 상호간의 협조를 위한 대표단의 교환, 각종 과학 문화자료와 도서의 교환, 작품들의 번역 출판, 예술 및 기록영화의 상영, 전람회 조직, 교육, 보건, 체육부문을 비롯한 기타 분야에서 이룩한 경험과 성과들의 호상교환 등의 내용이 규정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것이 남북한간의 관계에 직접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간의 문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협정의 내용이 이런 범주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협정의 조항속에 도서관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 명시해 놓으면 남북한간의 협력을 위한 전반적인 여건들을 향상시킬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도 동독국립중앙도서관과 서독국립중앙도서관간에 신간서적의 교환이나 각 대학간의 학위논문 교환 등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남북한간의 문화협정속에 포함될 도서관 정보자료의 교류협력의 내용은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국가간 관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류와 협력이 해당국가 관청이나 국가기구들을 제외한 일반조직이나 단체, 연합체 및 도서관 분야에 종사하는 개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개별적인 교류'가 이 협정의 본질적 요소로 되어야 한다. 남북한 교류협력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류를 국가가 관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접촉을 주선하고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나 민간단체들간의 교류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다만 도서관분야의 교류는 다른 분야의 교류와는 달리 개별적인 교류가 강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조직체나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서량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는 달리 교류협력으로 인한 이익이나 혜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려우므로 그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우 도서관의 장서구성이 도서관별로 특성화되어 있지 않고 인민대학습당이 모든 자료의 총집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이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도서관교류가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북한의 인민대학습당과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대표적인 기구를 축으로 한 교류협력의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특수자료 개방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접촉의 일환으로 국내의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에 대한 개방정책을 확대한다면 자료라는 매개물을 통해 북한이라는 사회, 그들의 의식구조, 현황, 실태 등에 대한 개략적인 측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 남북한 상호간의 이질감을 극복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1.2 도서관협력

남북한은 1992년 9월 3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 제7차 회의를 열고 부속합의서 채택을 위한 절충을 벌였다. 양측은 이날 정보자료의 교환, 공동연구조사 및 편찬사업을 실시키로 하는 등 상당부분 진척을 보였다. 따라서 남북한 부속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쌍방이 노력한다면 이것이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부문에 상당히 고무적일 될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와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남북한 도서관 정보자료 교류협력시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구체적 상황으로는 첫째, 정부는 '부속합의서'에서 명시한 목록 등 정보자료교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도서관 정보자료 교류협력에 관한 시행세칙을 수립하여야 하며, 둘째, 순수 민간차원의 '남북도서관 정보자료 교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정부와 정책수립이나 실제적인 교류협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에 민간차원의 도서관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한국도서관협회내에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발족된 '남북도서관 연구위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남북한 양측이 정보자료 교류협력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양측 국가대표도

서관으로 결정하여 이를 통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넷째, 정부차원에서 통일기금 중에 도서관교류기금을 마련하여 장기적 교류추진시 야기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도서관업무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상호협력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적절하다.

첫째, 종합목록의 작성이다. 남북한 양측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류협력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양측의 소장자료에 대한 목록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도서관 정보자료 교류협력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그 효과도 높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각종 서지류의 협동작성이 포함된다. 이것은 정보자료교류 및 도서관 상호대차의 전제가 되며 주요 도구가 되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앞서 동서독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남과 북은 '부속합의서' 제9조에서 목록 등 정보자료의 상호교환을 명시하고 있어 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만 남았으므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자료의 상호대차이다. 남북한이 각기 작성한 종합목록을 토대로 하여 상호 이용가능한 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은 분단이후에도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의 대출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양도 적지 않았다. 특히 통일이후 도서관계의 협력에 있어 가장 확실

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학술도서관 분야로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의 공동이용을 해왔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할 수 있어 통일을 이루는 큰 힘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남북한도 양측이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상호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면적 실시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기초과학, 순수학문 분야, 전통예술 및 순수예술, 민속학 등 비정치적이고 비이념적 분야부터 제한적으로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목록규칙의 작성이다. 양측이 소장 자료의 서지사항을 통일된 목록규칙에 맞추어 기술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은 분단 당시에 이미 동서독의 목록학자들이 공동목록규칙을 개발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모든 자료의 서지기술에 적용하였다. 남북한도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목록규칙만이라도 통일된 형태로 작성한다면, 통일이후 도서관계가 겪게 될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위논문의 교환문제이다. 남북한이 각기 출판한 모든 자료를 상호 납본하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나 초기 단계에서는 양측의 학문연구의 중요한 성과인 학위논문을 교환함으로써 연구의 중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통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일차적으로 몇 개 대도시로 확대시킴으로써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 별도로 '북한자료센터'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북한관에 자료를 비치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우 도서관의 개념, 운영목적, 자료내용, 이용방법 등 모든면에서 우리와 다르며 교류협력의 주체가 되는 북한의 도서관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그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거의 없고, 또한 발표된 내용일지라도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남북한의 도서관간에 직접적인 자료 교류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시적으로 양측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대표적인 도서관간의 장서목록을 교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환대상 자료목록은 북한의 경우 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도서잡지연합목록」, 「문헌소개목록」, 「잡지기사목록」 등을 들 수 있으며, 남한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하는 「장서목록」,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학술논저종합색인」, 「문헌정보」, 「남본월보」, 「출판예정도서정보」 등을 들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적으로 색인, 초록, 서지 등 2차자료를, 그 다음으로는 사전, 백과사전을 포함한 참고자료 순으로 교류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교류 추진 주체는 북한의 대표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인민대학습당, 남한의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국립중앙도서관부터 단계

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2 통일대비형 도서관정책과 제도모형의 개발

최근에 들어서 민생과 정치적 차원에서 실현되었던 남북 핵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책 모색, 쌀지원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측면에서의 각종 교류의 실천적 청신호는 조만간 남북 도서관교류와 협력의 실현가능성도 조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는 구체적인 사전대비와 능동적 정책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정책모형과 제도모형을 제시하기에 앞서 어떤 개발 철학을 확립하는가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의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남북한이 쌍방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관용적 자세를 통해 긍정적으로 상대방의 견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 철학을 확립하는데 우선성을 두고 한편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 및 제도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4.2.1 통일대비형 도서관정책 원리

(1) 자유경쟁의 논리

대외적으로는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와 세계 환경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선진국의 주장을

번역만 하면서, 국경의 소멸이나 국경없는 경제권이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시장개방이 곧 국가경쟁력과 국제경쟁력의 침경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단지 소수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과의 무한경쟁이 요구되고 있으며 따라서 매우 부담스러운 위험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서로 이질적인 양 체제의 통합과정에서 경쟁우위의 논리와 공평분배의 논리에 담겨 있는 정신적 격차감을 해소하고 통합초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해서 민족문화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정책을 설정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경쟁성과 공평성의 논리를 전제함이 좋을 것이다.

(2)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혁

전통적으로 공공도서관은 대표적인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도서관을 통한 의식개혁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데, 사회교육에 의한 의식개혁 교육의 가장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부문으로서는 민주적 시민정신과 시민의식, 공익정신과 공중도덕,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주의식, 인류애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북한의 체제가 통일후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될 것을 전제한다면 도서관계가 앞장서서 이러한 의식개

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정책체계를 확립해야 함도 당연한 것이다.

(3) 자주의식과 인류애

앞으로 세계체제의 골간을 이루게 될 WTO 체제는 세계정부를 그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과 국가간의 독립을 전제로 하고 1차적으로 선진국들의 국가이익에 적합하도록 통상과 교류에서 하나의 전세계적 시장체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체제하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자주의식을 강화하고 민족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보편적 인류애를 통해 진정으로 전인류적 공통의 과제와 이익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의식을 배양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민족문화를 알고 발전시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 세계를 알고 당당하게 경쟁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자주의식은 향후세기의 모든 민족의 문화가 교류하고 변화하면서도 자기 문화의 독자성과 개성을 상실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4) 과학적 사고

현대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과학문화이며 곧 합리성의 문화이다. 이러한 과학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형은 마땅히 과학적 사고를 요구 받고 있다. 여기서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에 대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성적으로 인과관계에 의해 사물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태도를 말한다.

단절의 세기를 통해 자유와 민주를 부정하는 왜곡된 개인숭배와 사상 체계하에서 생활해 온 북한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학적이며 합리적 사고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투자,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요소라 하겠다.

(5)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서양과는 달리 우리민족에게는 전통적으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천직의식이 있었다.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대하여 그것을 소명으로 알고 그 분야에서 대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노력하며 검소한 생활태도를 갖는 것이 향후 세기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 남한의 경우 이러한 전통이 공업화의 과정에서 많이 해이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를 회복해야 하며, 공산주의 체제에 익숙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북한과의 통합을 생각한다면 절실한 필요요소라 하겠다.

(6) 민주적 시민정신

민주적 시민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그 구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또 개인의 개성이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기꺼이 인정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의식과 생활태도를 배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북한사회의 특성을 개인숭배와 획일성

으로 본다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 시민정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통일도서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심도있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7) 공동체 의식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사회의식을 통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주의, 지역중심주의, 지역연고주의와 같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식은 모든 사고와 판단을 자기 지역중심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타 지역에 대하여 편견과 거리감을 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선택과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의식은 큰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안배와 균형의 유지, 인사상의 차별 폐지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도서관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남북간에 그리고 지역간에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8) 공익정신

공익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개인주의의 팽배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익과 함께 그에 균형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신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비약적 발전을 생산능력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도모하고자 한다면 사회구성원인 국민들의 공익정신을 추구하고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4.2.2 통일대비형 도서관 정책과 제도모형

위에서 고찰한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대안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선택과

민족적 동질성에 바탕을 둔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통일대비형 도서관 제도모형을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대비하면서 남북한의 도서관 당국자와 실무자, 문헌정보학자들이 만나 전문가회의를 구성하는 일이 급선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대비형 도서관 정책과 제도모형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남북한 도서관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기본적인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위한 접촉과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우리는 이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며 21세기 고도의 국제 경쟁사회에서 번영을 보장하는 장치로서의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에서의 도서관 개념, 운영목적, 자료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이 모두 남한과 상이하므로 도서관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체계가 통일된다고 해서 남한의 도서관제도의 효력이 북한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도서관의 존재와 그 실용성의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남한의 도서관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생각에 앞서 변화에 임하는 북한 도서관측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정책과 제도의 마련과 민족의 미래를 내다 보면서 정책과 제도모형이 구축되어야 한다.

(1) 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

앞서 살펴 보았듯이 사회교육 시스템으로서의 북한 도서관의 위상과 남한에서의 도서관의 위상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형태의 통일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될지는 분명하

지 않지만 일단 본격적으로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가정한다면 남북한에 있어서의 도서관이 가지는 기본적인 개념과 위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정보사회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정보적, 교육적, 오락적 및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도서관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2)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독일의 경우는 통일에 앞서 미리 전문가그룹을 조직하고 대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독일의 사례는 차치하더라도 도서관제도상의 예측과 행동오차를 최소화하고 상호 충분히 양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준비활동을 위한 기구로서 북한의 도서관운영관리방법연구소와 동급의 기구를 조직하고 그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 줌으로써 충분한 상호교류 및 협력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선결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문화체육부내에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연구소를 설치하여 통일을 대비하고 또 통일후에 실천할 도서관 정보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3) 인적 교류를 통한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도서관시스템은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과정 체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고 활용하는 데는 마땅히 정보전문직의 참여와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사서직 및 정보전문직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일이 당연한 과제일 수 밖에 없는데, 남북한에 있어서 이들 전문직종의 명칭문제, 정보전문직의 양성에 관한 제도는 국가적 중요사안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통일 도서관의 정책과 제도개념으로서 정보사회개념과 민족도서관 개념을 도입한다고 할 때 앞으로의 도서관계를 책임질 주체로서 이들 전문직을 양성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거시적으로 볼때 문헌정보직이란 전문직 명칭하에 문헌정보사관 전문가명칭을 이 기회에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4) 남북한간 정보자료의 적극적인 교류

남북한 도서관의 상호협력은 현 시점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언어와 민족사를 통일하는 탈 이데올로기 차원의 동질성 회복을 시도할 수 있으며, 양측이 제각기 생산하고 있는 정보의 생산량으로 볼 때 남북한의 정보 교류는 민족 전체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개념 위에서 도서관의 통합을 도모하는 시점에서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자료, 둘째, 북한측의 경제능력 개발과 국토재건을 위한 과학기술자료, 셋째, 민족동질성과 문화복원을 위한 자료 등을 중심으로 교류협력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5) 학술정보교류망 구축과 실현

우리는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의 목표를 선진형 산업사회로의 도약에 두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사회의 정보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가의

도서관시스템이 결국은 국가 정보유통체계라고 인식할 때 남북한 도서관계에서도 독자적인 정보화를 이룩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도서관계의 정보화사업 내용으로 첫째, 문헌생산과 소비 유통과정의 조정, 둘째, 각급 도서관 협동체제의 구축, 셋째, 이상적인 상호대차를 위한 방법, 넷째, 기술적인 네트워크의 구축방법, 다섯째, 정보생산과 이용에 있어서의 표준과 기준의 마련 등을 제도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6) 문헌정보학 교육체제의 변혁

문헌정보학의 교육내용은 현재에도 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민족문화를 계승,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일된 남북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의 교육은 남북한의 동질적 정보사회와 동질적 민족문화의 회복과 창달이라는 목표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정보의 부족으로 현재로서는 북한의 문헌정보학 교육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상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교육의 목표를 두고 볼 때 남북한간에 교육체제 내부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인력과 자원의 교류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문헌정보학 교육은 현재 남북한에서 행하고 있는 수준을 높여야 하는 당위성을 크게 고려해야 한다.

(7) 도서관 시설장비류의 현대화와 정보기술의 이양 및 공동개발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내부 경제

사정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유통체계를 현대화하는 데는 자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북한의 도서관이 현재 정보기술의 개발과 현대화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체제유지의 목적상 북한의 도서관이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효력을 유지해 왔고 또 그 존재이유를 인정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 여전히 북한의 도서관이 자유경쟁과 민주주의 체제속에서도 경쟁력과 생존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경쟁의 사회에서 북한의 도서관도 자생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서관의 현대화와 정보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과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 점에서 북한의 도서관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된 남북한의 도서관계는 상대적 비교우위에 있는 남한의 정보기술과 북한 도서관의 효율성을 접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지난 1945년 이래 우리나라는 냉전적 정치질서하에서 오직 반공노선으로 일관한 외교노선과 국내 정치적인 특성도 공산권에 대한 지역 연구보다는 마스 레닌주의 중심의 이데올로기 측면을 강조한 지엽적인 연구에 국한되었다.

즉 중국 소련 및 동구지역은 정치적, 학문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아직도 이 분야의 연구는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90년대 들어 남한은 정부의 대공산권 정책 변화에 따른 7.7 선언 및 북방정책의 추진을 통해 소련을 비롯한 많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다양하게 교류를 시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착실히 경제적 교류를 증심하여 학술과 문화, 예술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계획되어 진행하고 있다. 화해와 협력의 국제적 분위기 위에서 국내외적 관심의 동향은 조만간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이에 대비한 각 분야의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통일된 남북한에 있어서 문명의 큰 흐름이 정보사회로 변전하는 이 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공, 축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국가적 중대사라고 하겠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정보유통과 사회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을 위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자료가 허락하는 한 이를 상세히 분석하고 통일 전후의 독일의 경우를 살펴 보면서 남북한 도서관의 상호교류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일에 앞서 우선적으로 남북한 도서관간의 협력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종합목록의 작성, 자료의 상호대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목록

규칙의 작성, 학위논문의 교환 등과 같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원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일은 지배 모델로서의 통합흡수형이 아닌 상호의존 모델로서의 병존협력의 개념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원리에는 1) 자유경쟁의 논리 2)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혁 3) 자주의식과 인류애 4) 과학적 내지는 합리적 사고 5)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6) 민주시민정신 7) 공동체의식 8) 공익정신 9) 세계정신을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

넷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제도모형은 남북한의 도서관이 1) 도서관의 위상통일 2)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3) 전문인력의 교류 4) 정보자료의 교류 5) 학술정보망의 구축 6) 문헌정보학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준향상 7) 현대화 및 정보기술 개발과 이양 등을 내용으로 갖추고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동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한의 도서관은 그 개념, 운영목적, 자원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그 실용성의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도서관은 통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 충격이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상호 공조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는 과제로서의 남북한 도서관의 통일을 대비한 정책과 제도의 개발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사안에 따라서 구체

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도서관협회의 남북한 도서관 연구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며 문화체육부 내에 도서관 정책제도 및 문헌정보학 연구소의 시급한 설립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문제가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국가중앙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 및 문헌정보연구부를 설치하는 직제개편이 즉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 高哲義. 1987.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圖書館事情”. 圖書館雜誌 81(8) : 455-456.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1992. 조선말대사전.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국민일보. 1992년 6월 15일자.
- 김순배. 1989. 북한의 교육실태(국통연 89-12-139). 서울 :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 金順子. 1989. “朝鮮國家圖書館-人民大學習堂概況”. 福建圖書館學刊 39 : 55.
- 노문자. 1986. “서독의 국립도서관”. 도서관학연구지(송의여자전문대학) 11 : 30-49.
- 노문자. 1993. “통일독일의 도서관 통합과정”. 도서관문화 35(1) : 16-24.
- 박영호, 박종철. 1993.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93-29 : 83-129.
- 북한총람 : 1945-1982. 1983. 서울 : 북한연구소

- 백과전서 2. 1983.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백과전서 6. 1984.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신용철. 1990.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문제연구 2(4) : 153-183.
- 송승섭. 1994. "북한도서관의 기능과 현황 상, 하". 북한 1월호 : 152-159, 2월호 : 142-149.
- 양기백. 1991. 미의회북한관계자료 실태분석. 서울 : 통일원.
- 양일운. 1982. "북한의 도서관". 북한 126 : 108-119.
- 陸榮用. 1989.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圖書館的基本情況". 圖書館理論 實踐 1期 : 78-80.
- 윤재근, 이상호, 박상천. 1991. 북한의 문화정보 I. 서울 : 고려원.
- 정분희. 1993.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선말대사전. 1992.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조성진. 1992. "북한의 미술정책과 남북 미술교류 전망 연구". 통일문제연구 4(4) : 221-243.
- 初中元. 1991. "朝鮮의科學技術文獻 情報工作". 山東圖書館季刊 第2期 : 18-19.
- 통일원. 1990. 내독관계발전사 : 동서독 관계자료 3. 서울 : 통일원.
- 통일원. 1992. 독일통일소사전. 서울 : 통일원.
- 통일원. 1993. 남북기본합의서 및 분야별 부속 합의서 타결과정. 서울 : 통일원.
- 鮑振西. 1992.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的圖書館事業". 圖書館建設 69 : 13-18.
- 한상완. 1994. "도서관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도서관문화 34(6) : 5-15.
- 한승헌. 1993. "남북부속합의서에 따른 저작물의 상호보호방안". 인권과 정의 197 : 87-93.
- Bibliotheksplan '73. 1973. Entwurf eines umfassenden Bibliotheksnetze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 Deutsches Bibliotheksinstitut. (DBI - Materialien, 106)
- Rechtvorschriften für die bibliotheksarbeit. 1992. Berlin : Deutsches Bibliotheksinstitut. (DBI - Materialien, 110)
- Yang, Key P. 1963. "Present Conditions of Libraries in North Korea". Korean Affairs 2(2) : 187-198.